

복지예산 삭감철회하고 삶의 질 보장약속 이행하라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재경원 기자실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사회복지담당 : 이정운 : 795-5918)
제 목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 촉구집회
날 짜 1996. 9. 11. (총 6 쪽, 집회개요, 성명서 및 참고자료 각1부 포함)

보 도 자 료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일시 및 장소 : 1996년 9월 11일 12시. 정부제1종합청사 후문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민변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11일 12시,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 촉구 공동집회를 개최하였다.
3. 집회의 목적은 최근 재경원이 당정심의 자료로 제출하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확정된 1997년도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규탄과 정부에서 약속한 국민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비롯한 국민복지 향상 등 각종의 사회복지 발정부안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현재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4. 이날 집회는 개회사에 이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연설, 사회복지 각 분야별 발표와 성명서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5.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국민의 사회적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

1. 집회내용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 촉구집회

1. 집회개요

- 일시 : 1996년 9월 11일(수) 오전 12시
- 장소 : 정부제1종합청사 후문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 민간정보육시설연합회, 부스러기선교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2. 집회순서

사 회 :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개회사(집회취지) / 사회자
연설 : / 조흥식(曹興植,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예산 삭감 규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연설)

주최단체별 연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위원회
부스러기 선교회

성명서 낭독 / 유옥순(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2. 집회취지 및 목적

- 지난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한 이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왔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국민복지기획단이 구성되어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비롯하여 각종의 사회복지 발전방안 등을 발효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문민정부들어 축소추세에 있는 사회복지예산과 열악한 복지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청사진은 또다시 선언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재경원이 1997년 예산안에 대해 당정심의 자료로 제출하고, 당정협의 과정이 끝난 지금 한국 사회복지지는 점점 더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인 MRI에 대한 보험급여, 농어촌 의료원 설치, 노인치매센터 건립,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전액삭감된 반면 방위비와 관변단체 지원 및 여당의원 지역사업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책 사업들에 예산이 대거 배정되었다.

-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은 국제용으로, 선거용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발하였던 과거의 정권과 하 등에 차이가 없는 추상적 구호와 선언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오늘의 집회는 정치성, 선거선심용 예산편성과 시대착오적인 방위비 증액의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노인, 장애인, 아동, 빈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증액과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최소한 GDP 5%의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그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3. 향후 계획

- 9월 11일 집회 후 주최단체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사회복지단체들이 참여한 공대위를 구성하여 삶의 질 개선 및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한 운동의 전개
- 국회 상임위원회 방청 및 모니터
-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 대한 감시운동
- 현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성명서> '복지예산 증액하여 삶의 질 보장약속 이행하라'

지난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이후 김영삼대통령은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발전방안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문민정부에 의해 '선성장후복지' 논리하에 지속되어온 개발독재시대가 마감되고, 실질적인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정협의를 마친 1997년도 사회복지예산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위한 MRI 보험급여, 농어촌지역 의료원 설치, 의사상자 구호비 인상, 노인치매센터 건립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 현재 12조 7천억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12% 증액하여 문민정부 탄생 후 방위비 인상을 한자리수로 묶겠다던 약속을 깨뜨린 것은 물론, 근로자복지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1백10억원을 관변단체지원으로 편성하는등 국민복지와는 거리가 먼 방위비 우선, 복지예산 뒷전의 예산편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에 대한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이며, 이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50년대에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을 목전에 두고, 1인당 GNP 1만불 시대라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은 아직도 성장의 그늘 속에서 소외되어온 노인, 장애인, 아동, 빈민, 여성등 사회적 약자들이 절대적 빈곤속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복지부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뿐더러,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 또한 엄청나게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는 사회통합을 진전시켜 산업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병리현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세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이는 비생산적인 비용이 아님은 물론, 어떠한 국방논리나 경제논리 그리고 정치논리에 의해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민적 해결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 촉구집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시대착오적인 방위비 증액의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노인, 장애인, 아동, 빈민, 여성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2000년 초까지 세계 15위의 삶의 질의 세계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GDP5%의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2000년까지 매년 40% 이상의 복지예산증액을 요구합니다.

- 정부는 방위비, 관변단체지원 삭감하고 '삶의 질' 향상위한 복지예산 증액하라.
- 정부는 향후 2000년까지 GDP 5% 수준의 복지예산증액을 위해 매년 40% 이상씩의 복지예산 증액하라.

1996. 9.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스리기선교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